

## 공기업 개혁

조 성 봉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기업 개혁

1권1쇄 인쇄/ 2007년 12월 18일

1권1쇄 발행/ 2007년 12월 24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김종석

편집인/ 김종석

등록번호/ 제318-1982-000003호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화 3771-0001(대표), 3771-0057(직통) / 팩스 785-027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07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

값 3,000원 / ISBN 978-89-8031-473-7

## 목 차

- I. 문제제기: 참여정부의 방만한 공기업 운영 / 7
  
- II. 공기업, 왜 개혁하여야 하는가? / 9
  - 1. 공기업의 독점성과 이에 따른 문제점 / 9
  - 2. 운영의 비효율성 / 10
  - 3. 자원배분의 왜곡 / 12
  - 4. 정부의 개입과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확장의 문제점 / 14
  
- III. 차기정부 공기업 개혁을 위한 제언 / 16
  - 1. 공공부문에 대한 철저한 기능 재검토 / 16
  - 2. 공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 16
  - 3. 민영화와 시장규율 메커니즘의 확보 / 18
  - 4. 민영화 대상 / 20
  
- 참고문헌 / 28

## 표 목차

- 표 1. 공공기관의 유형별 개요 | 21
- 표 2. 102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목록 | 22
- 표 3. 기타 195개 공공기관의 목록 | 23

# 공기업 개혁





## I. 문제제기: 참여정부의 방만한 공기업 운영

- 참여정부에서는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되던 공기업 개혁 전면 중단
  - 전력산업: 구조개편 2단계인 배전부문 분할 중단 및 한전의 발전자회사 민영화 중단
  - 천연가스산업 구조개편과 가스공사 민영화의 중단
  - 철도산업 경쟁도입과 민영화의 중단
  -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논의 중단
  
- 공기업의 비대화
  - 공기업 부채규모: 194조8,985억 원(2002년)에서 295조8,243억 원(2006년)으로 부채규모가 100조 원 이상(51.8%) 증가<sup>1)</sup>
  - 공기업 정부지원금: 34조 원(2002년)에서 48조8천억 원(2006년)으로 44% 증가
  - 공기업 인력: 21만3,080명(2002년)에서 23만8,766명(2006년)으로 4년간 2만5,686명(12.1%) 증가
    - 특히 대한주택공사(49.4%), 국민연금관리공단(23.3%) 등은 인원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 공기업 운영의 비효율
  - 공기업에 대한 공익목적 강요로 공기업 경영 왜곡
    - 영리법인으로서 수익성을 추구하여야 할 공기업에 대하

---

1)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www.ecos.bok.or.kr>)

여 공익목적성을 강요하여 주주 및 소비자의 편익 침해

- 공익목적은 공기업이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복지 차원에서 다른 정부부처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주요 사례

- 한전은 요금체납 소비자에 대한 단전유보 확대, 이주민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장애인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등으로 체납액 급증
- 주택공사는 임대주택 건설과 운영에 따른 손실을 신규 주택 분양가에 전가하여 신도시 분양원가 폭등



## II. 공기업, 왜 개혁하여야 하는가?

### 1. 공기업의 독점성과 이에 따른 문제점

#### □ 공기업의 독점성

- 공기업은 다음의 이유로 강력한 독점성 보유
  - 자연독점적 산업: 전력, 가스, 철도, 도로, 수도, 통신, 지역난방 등과 같은 네트워크형 산업의 경우 초기투자비와 시설투자비가 커서 상당한 규모의 경제의 성격을 갖게 됨.
  - 공공성이 커서 민간에 맡기는 것이 부적절함.
    - 예: 조폐사업
  - 수익성 높은 사업의 독점적 운영을 통한 정부수입 확보
    - 예: 예전의 전매사업, 경마사업, 카지노사업 등
- 그러나 이를 공기업이 독점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당위성은 없음.
  - 자연독점적 산업
    - 선진국의 사례에서처럼 민간이 자연독점적 산업을 운영하되 정부가 공익산업으로 이를 규제할 수 있음.
    - 전력산업의 발전 및 판매부문과 가스산업의 도입 및 판매부문과 같이 수직적으로 분할하는 경우 자연독점적 성격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도입 가능
  - 공공성도 정도에 따라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경우가 다양하게 나타남.
    - 조폐사업의 경우 위조지폐 방지 및 보안안전관리상의 문제로 공공부문이 깊이 관여할 수밖에 없으나,

- 전기안전이나 가스안전과 같은 부문에서는 민간의 화재보험사업과 연계하여 안전의식과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가능함.
  - 또한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에 대한 최종적 관리와 책임은 공공 부문이 맡는다고 할지라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민간에 아웃소싱을 줄 수 있으며 공공부문에서 서비스와 기준을 표준화하는 경우 민간대행도 가능
- 정부가 수입확보의 수단으로 공기업을 운영하는 방안은 더는 바람직하지 않음.

□ 공기업 독점에 따른 문제점

- 잠재적인 민간의 진입과 경쟁유도 불가
- 소비자의 선택과 경쟁의 부재에 따른 상품시장에서의 규율 불가
- 관련 공무원, 경영진, 임직원 및 노조의 지대추구적 행태
  - 자신이 관리하는 공기업이 더 큰 독점수익을 얻도록 노력
  - 자신이 종사하는 고유 업무영역에서 경쟁을 거부하며 민영화를 철저히 반대

2. 운영의 비효율성

□ 다중적 대리인 문제

- 주-대리인 문제(Principal Agent Problem):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에서 전문경영인이 기업의 실제 주인인 주주의 이해를 따르지 않는 문제점

- 공기업의 경우 이러한 주-대리인 문제가 이중으로 나타남.
  - 국민이 공무원에게 공기업의 경영을 위임하고
  - 다시 공무원이 공기업 경영진에게 경영을 위임함에 따라 전통적인 주-대리인 문제가 이중적으로 발생하여 운영이 비효율화되고 사실상 공무원이나 공기업 경영진들의 이해를 위하여 공기업 경영이 왜곡될 가능성이 큼.
  - 이러한 대리인 문제로 인하여 국민 모두가 주인이라는 것은 결국 아무도 주인이 아니라는 것과 실질적으로 같기 때문에 공기업이 주인 없는 기업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개연성 큼.

□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

- 경영감시, 평가 및 규제 대상인 공기업은 제한된 정보만 정부에 제공하여 이른바 정보의 비대칭성이 나타남.

□ 취약한 시장규율 메커니즘

- 상품시장의 독점성으로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이 제약되어 있어서 상품시장의 규율 메커니즘 작동 취약
- 채권자 및 은행이 규율하는 금융시장 메커니즘도 정부가 사실상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느슨하게 적용됨.
- 자본시장에서의 규율 메커니즘도 제한적임.
  - 상장된 공기업은 한전과 가스공사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 상장된 공기업이라 할지라도 정부가 지배적 지분을 갖고 있어 다른 소액주주의 시장규율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음.

□ 연성예산제약의 문제(Soft Budget Problem)

- 이상과 같은 공기업 운영의 비효율성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연성예산제약의 문제임.
- 즉 공기업의 예산제약이 정부의 암묵적 보증으로 인하여 민간처럼 심각하게 작용하지 않음.
- 공기업은 파산의 걱정이 없고 어떤 형식으로든지 정부가 나중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알고 있는 공기업 경영진이 예산제약에 대한 심각한 두려움 없이 공기업을 운영하여 큰 비효율성과 무책임이 나타남.
- 또한 어차피 공기업이 잘못되면 국가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채권자와 주주도 예상하기 때문에 시장규율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임직원도 주인의식 없이 일하게 되는 것임.

### 3. 자원배분의 왜곡

□ 공익성을 수익사업과 병행 추구하여 자원배분을 왜곡

- 저소득층 지원과 각종 복지정책
- 분배정책 차원의 공공성 추구는 공기업의 조직확대와 연계되어 있음.
  - 일례로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임대주택의 건설과 운영은 상당한 적자를 불러들이고 있으나 거꾸로 이는 주택공사가 높은 수익성을 보이는 택지공급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당위성의 근거가 됨.

□ 교차보조(Cross Subsidization)의 확대와 자원배분의 왜곡

○ 공기업의 공익성 추구는 다음과 같이 대부분 다른 소비자의 편익의 대가로 이루어짐.

- 철도공사의 부채 탕감은 일반 국민이 철도소비자를 지원하는 것임.

- 주택공사의 경우

• 임대주택의 건설과 유지보수에 적자를 보면서 이를 분양주택과 택지공급에서 난 흑자로 보충하는데, 이는 결국 분양주택 소비자가 임대주택 소비자를 지원하는 것임.

• 수도권에 대해서는 적정가격보다 비싸게 택지를 공급하고 지방에 대해서는 적정가격보다 값싸게 공급하는데, 이는 결국 수도권 택지소비자가 지방의 택지소비자를 지원해 주는 결과임.

- 전기요금의 경우

• 산업용과 농사용은 원가 이하로 공급하며 주택용과 일반용은 원가보다 비싸게 공급하여 주택용 및 일반용 소비자가 산업용 및 농사용 소비자를 지원

• 전국적으로 단일한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송배전비용이 비싼 지역의 소비자 또는 발전설비에 대하여 송배전비용이 값싼 소비자가 지원하는 셈임.

○ 교차보조의 종류

- 소비자 간 교차보조: 서로 다른 유형의 소비자 간에 이루어지는 교차보조

- 지역 간 교차보조: 서로 다른 지역에 위치하는 소비자 또는 사업자 간에 이루어지는 교차보조

- 사업자 간 교차보조: 서로 다른 유형의 원료 및 중간재를 공급하는 사업자 간에 이루어지는 교차보조

#### 4. 정부의 개입과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확장의 문제점

##### □ 공기업 경영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그 문제점

######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 형식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의 확립과 자율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 실질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정관, 이사회, 임원, 예산회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 경영지침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자율성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수단 상실

###### ○ 참여정부의 소프트웨어적인 공공혁신의 문제점

###### - 참여정부 공공혁신의 특징

- 공기업을 경쟁과 민영화에 노출시키는 하드웨어적 구조개혁보다는 일하는 방식과 서비스를 개선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변화를 추진
- 기존의 경영평가에 고객만족도, 청렴도 그리고 혁신평가 등을 추진하여 아주 상세하고 세부적인 경영평가 시행

###### - 문제점

- 복잡하고 상세한 평가기준으로 인하여 책임경영체제와 경영의 자율성 훼손
- 세심한 '점수관리'와 여러 당사자들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 관리를 통하여 공기업의 본질적 업무보다는 외형적 포장에 집중

###### ○ 정부의 경영개입은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크게 훼손

##### □ 공공부문은 Niskanen(1971)이 지적한 것처럼 예산극대화로 조직을 확대

- 공기업의 확장은 개별 정부부처 확대의 일환
  - 개별 정부부처는 자신이 관장하는 기관에 대한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조직적 인센티브 가짐.
  - 특히 낙하산 인사를 늘려서 개별부처 공무원의 이해를 반영하고 부처의 행정 및 집행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산하 공기업조직을 확대할 유인을 가짐.
  - 낙하산 인사는 공기업 CEO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정부부처와 이해당사자 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유발할 개연성이 큼.
  
- 공기업의 자체적 구조개혁의 한계와 인센티브 결여
  - 공기업은 이상과 같은 이유로 스스로 자신들의 조직을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수행할 유인이 없음.
  - 정부부처와 정치권도 공기업 경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낙하산 인사를 없애려는 자발적 인센티브 결여
  - 공무원과 정부부처가 다양한 이해당사자와의 갈등을 무릅쓰고 교차보조를 시정하고 자원배분을 합리화할 인센티브 결여

### III. 차기정부 공기업 개혁을 위한 제언

#### 1. 공공부문에 대한 철저한 기능 재검토

##### □ 전체적인 공공부문 역할의 재검토

- 전 공공기관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과 기능 재검토 추진
- 상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할 때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므로 공공성과 상업성을 원칙적으로 분리
- 상업성을 추구하는 조직에 대해서는 민영화 추진

##### □ 공공성의 추구

- 공공성과 상업성을 분리할 경우 공공성이 강한 영역은 별도의 기관으로 분리
  - 사례: 한전에서 발전부문 분리 시 계통운전을 담당하는 전력거래소를 기존 한전의 기능에서 분리하여 신설
- 그동안 공기업 또는 준공공기관이 정부부처를 대행하여 추진하여 왔던 정책 및 그 보조 기능을 정부조직으로 이관

#### 2. 공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 □ 공기업에 대한 경영개입 최소화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 또는 전면 개정하여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 공기업 사장 임명 과정에서 정부부처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낙하산 인사 방지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정관, 이사회, 임원, 경영지침, 외부감사 등 다양한 기준 중에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공기업의 자율적 경영 보장
  - 획일적이고 통일적인 감사기준과 회계원칙의 적용도 탈피
- 경영평가 개선
- 지나치게 상세하고 복잡한 경영평가를 몇 개의 지표로 알 수 있도록 단순화
  - 공기업 간 줄 세우기식의 서열평가를 지양
- 기업형 공기업에 대한 공익성 강요, 교차보조 및 가격규제 최소화
- 공기업에 대한 공익성 부과를 최소화하고 이를 정부의 보건복지 등 다른 정부기능으로 보완
    - 공익성을 반드시 추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또는 상업성이 거의 없는 공공기관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추진
  - 공기업과 관련된 사업분야에서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소비자 간, 지역 간, 사업자 간 교차보조를 철폐
  - 불필요한 정부의 가격규제를 최소화
- 공기업의 책임성 강화
- 정부의 지원금과 채무보장 등을 최소화하고 정부는 주주로서의 역할만 성실하게 추구하는 복구형 공기업 운영방안 채택
  - 공기업이 스스로에 대한 재무상황에 책임지도록 하는 실질적인 공기업 파산제 도입

### 3. 민영화와 시장규율 메커니즘의 확보

#### □ 적절한 규율 메커니즘의 확보

- 공공부문은 국민이 국회와 감사원 및 정부조직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감시하고 지켜보므로 최소한의 규율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셈임.
- 이를 시장의 역할로 대체하려고 하는 민영화의 경우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규율 메커니즘의 확보가 필수<sup>2)</sup>
- 경쟁환경의 확보
  - 독점성을 완화하고 경쟁이 나타날 수 있는 경쟁환경을 조성
    - 공기업을 여러 개로 나누는 빅뱅형 분할방안
    - 진입을 자유롭게 하여 점진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
  - 특히 자연독점적 네트워크 사업영역과 경쟁이 가능한 사업영역이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경우
    - 수직적 통합구조를 수직적으로 분할하여 경쟁이 가능한 부문과 그렇지 않은 부문으로 분할
    - 경쟁이 가능한 부문에 대해서는 사업체를 분할하여 경쟁 유도
    - 시장거래를 표준화하고 관리하는 조직/사업체 분리
  - 이와 함께 시장참여자가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교차보조, 가격규제 또는 시장에 개입하는 다양한 요소를 제거하여야 함.

---

2) Kikeri & Kdo(2005)에 따르면 경쟁적인 산업에서의 민영화가 더욱 성공적으로 나타났으며 인프라에 대한 민영화도 적절한 시장구조, 규제체계가 자리 잡혀 있을 경우 더욱 성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한편, 자연독점적 성격과 안정적인 사업환경을 정부가 마련하여야 하는 경우 적절한 규제기관의 설립을 통한 규칙의 제정과 집행으로 시장규율 방안을 정립

□ 민영화는 장기적인 절차라는 시각이 중요

- 바람직한 민영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규율 메커니즘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완벽한 규율 메커니즘은 어차피 시장과 산업의 성숙을 통해서 정착되는 것임.
- 민영화되는 공기업의 사업환경은 민영화 개시 시점까지도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음.
-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되어도 민영화 개시 이전까지 긴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상업성과 공공성을 분리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추진
- 시장환경이 정착되지 못한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다소 남아 있더라도 민영화를 일단 개시하고 매각가치의 제고를 위하여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시점 이후에 경영권을 매각하는 지혜가 필요

- 영국의 민영화 사례: 영국에서는 초기 사업환경이 불확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신과 전력사업체의 민영화를 개시하였고 이후 사업환경이 크게 개선되어 매각가치가 증가되었음.

- British Telecom을 1984년에 51%, 1991년에 28%, 1993년에 22%의 순으로 매각하였으나 매각수익은 39억 파운드, 55억 파운드, 53억 파운드로 오히려 주당 매각가치는 크게 상승
- 전력산업의 경우 발전사업체인 PowerGen과 National Power는 1991년에 60%, 1995년에 40%의 순으로 주식을 매각하였으나 매각수익은 28.5억 파운드에서 33.5억 파운드로 크게 증가

- 영국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먼저 민영화 과정이 개시되고 민간의 이해당사자들이 출현하고 시장에서 참여자들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경우 규율 메커니즘이 빨리 자리 잡게 되고 시장환경이 급속히 개선됨.
- 민영화는 오랜 시간과 세심하고 복잡한 과정을 요구하는 장기적인 절차이므로 규율 메커니즘과 시장환경의 개선까지도 고려하여 구체적인 민영화 일정과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함.

#### 4. 민영화 대상

##### □ 공공기관 현황

- 2007년 1월 제정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모두 297개로서, 이들 중 공기업 24개, 준정부기관 78개 그리고 미분류 공공기관(또는 기타 공공기관)은 195개임.
  - 공기업은 생산활동의 재원 대부분을 민간에 대한 매출수입으로 보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보전 정도에 따라 시장형과 준시장형을 구분함.
  - 준정부기관은 생산활동의 재원 대부분을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보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법정 기금의 관리 여부에 따라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구분함.

| 표 1. 공공기관의 유형별 개요 |

기관유형		개수	임직원(명)	자산(억 원)	부채(억 원)	지출(억 원)
공기업	시장형	6	26,655	911,523	336,515	528,691
	준시장형	18	59,494	1,494,520	853,038	569,388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65	48,620	503,182	244,458	392,198
	기금관리형	13	16,153	278,417	69,336	369,306

- 정부는 2007년 4월 기획예산처 고시를 통하여 102개 기관에 대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유형을 구분하고 그 나머지 195개 기관에 대해서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표 2>, <표 3> 참조).
  -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의 대부분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그 유형이 분류되지만,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다수 있음.
  - 직원 정원이 50인 미만인 공공기관은 전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됨.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언론 등에서 사용하는 공기업이란 용어는 통상 공공기관 전체를 지칭함.
  - 법률이 제정된 이후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자기업체, 정부출연기관 등의 다양한 명칭은 점차 사라지고 있음.

| 표 2. 102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목록 |

유 형		공공기관
공기업	시장형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6개)
	준시장형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마사회,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산재의료관리원,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18개)
준정부기관	위탁 집행형	증권예탁결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국과학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대한지적공사,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국제방송고교재단, 대한체육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등급판정소, 한국농촌공사, 한국석유품질관리원, 광해방지사업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예너지관리공단, 요업기술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우정사업진흥회,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우편사업지원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노동교육원,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선박검사기술협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소비자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한국소방검정공사 (65개)
	기금관리형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수출보험공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13개)

자료: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 고시 제2007-28호」, 2007년 4월 2일.

표 3. 기타 195개 공공기관의 목록 I

부 처	공공기관
재경부	(주)기은캐피탈, 기보캐피탈, 기은신용정보(주), 산은자산운용주식회사, 산은캐피탈주식회사, (주)아이비캐이텍, (주)정리금융공사, 중소기업은행, 코스콤, 한국기업데이터주식회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13개)
교육인적자원부	강릉대학교 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동북아역사재단, 민족문화추진회,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16개)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3개)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更生보호공단 (2개)
국방부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호국장학재단 (3개)
행정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개)
과학기술부	고등과학원, 공공기술연구회, 광주과학기술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극지연구소, 기초기술연구회,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산업기술연구회, 원자력의학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 핵융합연구원 (36개)
문화관광부	(사)전국문화회관연합회, (재)국립발레단, (재)국립오페라단, (재)국립합창단, 경북관광개발공사,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장애인체육회,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예술의전당, (재)서울예술단, (재)정동극장,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개발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인문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25개)
농림부	(주)농지개발, 가족위생방역지원본부, 농림기술관리센터,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4개)

자료: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 고시 제2007-31호」, 2007년 4월 11일.

표 3. 계속

부처	공공기관
산업 자원부	기초 전력연구원,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인천중합에너지(주), (주)강원랜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기술거래소,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기전 자시험연구원,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전자거래진흥원, 한국전자파연구원,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한국표준협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전KD N, 한전KPS(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22개)
정보 통신부	별정우체국연합회,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프로그램심 의조정위원회 (4개)
보건 복지부	국립암센터, 대한결핵협회,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7개)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친환경상품진흥원 (2개)
노동부	학교법인가능 대학, 한국국제노동재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3개)
건설 교통부	(주)코레일개발, (주)코레일에드컴, (주)코레일엔지니어링,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코레일유통(주), KTX관광레저(주),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 한국철도시설산업주식회사, 한국철도전기시스템(주), 한국토지신탁 (12개)
해수부	부산항부두관리공사, 인천항부두관리공사, 한국어촌어항협회 (3개)
국무 조정실	경제인문사회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4개)
보훈처	88 관광개발(주) (1개)
문화재청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개)
산림청	녹색자금관리단 (1개)
중소 기업청	시장경제지원센터,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투자 (6개)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2개)
금융 감독위	금융감독원, 한국자산신탁(주) (2개)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2개)

자료: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 고시 제2007-31호」, 2007년 4월 11일.



□ 방송광고시장의 경쟁도입과 방송 민영화

- 공중과 TV방송의 경우 KBS, KBS2, MBC, EBS 등 4개의 방송국이 공영이며 민영은 SBS만 존재하여 공중과 방송의 다양성과 시청자의 선택권 제한
- 방송부문의 비효율성은 공공부문의 높은 비중과 방송광고에 대한 경쟁의 제한이 그 원인임.
- 이에 따라 현재 방송광고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방송광고공사를 폐지하고 방송광고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며 시청자의 선택에 많은 광고와 높은 광고비가 집중되도록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 KBS2는 현재 상업용 오락프로를 중심으로 사실상 민영방송과 경쟁하고 있어서 국영으로 운영할 당위성이 적으므로 민영화 추진
- MBC의 경우도 정수장학회의 지분을 방문진에 넘기고 방문진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민영화 추진
- 방송의 민영화 과정에서 대기업 등이 이를 인수하는 것에 대한 저항감이나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으므로 그 소유 및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방송이 특정 이해집단을 반영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 강구

□ 전력산업

- 한전의 100% 자회사인 6개 발전자회사를 민영화하되, 그 첫 단계로서 현재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되어 있는 남동발전의 민영화를 추진
- 주식상장보다는 경영권 매각이 바람직함.

- 현재 송전과 배전 및 판매가 통합되어 있는 한전의 사업구조에서 배전과 판매를 분리하는 방안과 여기서 다시 판매를 발전사업자가 통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중심으로 산업구조 개편방안 검토
- 이 외에도 한국전력기술(KOPEC)과 KPS 민영화 추진

#### □ 가스산업

- 가스공사는 전국 배관망의 건설과 관리를 맡도록 하며
- 천연가스의 도입과 인수·저장 기능은 경쟁도입이 가능한 부문이므로 분할민영화가 바람직함.
- 특히 현재의 인수기지가 인천, 평택 및 통영의 3곳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이를 도입기능과 연계하여 인수·저장설비를 소유하며 도입기능을 맡은 3개의 도입회사로 분할하여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국 배관망에 대한 계통운영과 수급조절기능을 전담하는 가스거래소를 가스공사로부터 분리하여 설립
- 한편, 대용량 수용가가 도입회사와 직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대용량 가스거래에 경쟁을 도입하고 도시가스 회사의 판매 및 설비운영은 회계를 분리하되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이에 대한 겸업은 허용하는 방식으로 소매경쟁 도입

#### □ 철도사업

- 철도공사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고
- 일부 노선에 대한 민간위탁을 통해 간접비교를 통한 잣대 경쟁(yardstick competition) 유도

□ 상하수도사업

- 공공부문 간 경쟁을 통해 수도사업을 광역화한 뒤 민영화
- 일례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자체가 경영능력을 인정받은 서울시 등의 지자체나 수자원공사에 수도사업 경영권을 넘겨서 사업규모를 대규모화한 이후 민영화
- 수자원공사도 상수도사업을 별도의 자회사나 분리된 법인을 통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국내 물시장의 경쟁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우정사업

- 우편사업과 금융사업을 분리하고 금융업은 민영화하고
- 우편사업은 우선 공사화(corporatization)한 후 많은 비용에 대한 보전방법과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한 이후 민영화

## 「 참고문헌 」

- 감사원,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태 감사결과-』, 2005.
- 기획예산처, 『2004년도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2006.
- \_\_\_\_\_, 『2006년도 공공기관 경영혁신 지침』, 2006.
- 김현석·박개성·박진, 『정부개혁 고해성사』, 박영사, 2006.
- 산업자원부,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 1999.
- \_\_\_\_\_, 『발전회사간 경쟁강화 방안 연구』, 2005.
- 윤성식, 『정부 개혁의 비전과 전략』, 열린책들, 2002.
- 이주선, 『공기업의 민영화와 구조개혁』, 『공기업논총』, 제10호, 1998, pp.103-133.
- \_\_\_\_\_, 『김대중 행정부 민영화정책 평가와 시사점』, 자유기업원, 2001.
- 조성봉, 『공기업 및 준공공부문 개혁』, 『모두 잘 사는 나라 만드는 길(Ⅱ): 공공·재정부문의 제도개혁 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02, pp.85-136.
- \_\_\_\_\_, 『공기업 민영화의 평가와 정책방향』, 『표류하는 한국경제 활로는 없는가?』, 나남출판, 2004, pp.145-191.
- 한국개발연구원,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 공청회 발제자료, 2005.
- 한국철도공사, 『철도공사 중장기(2005-2009) 경영개선기본계획』, 2005, p.69.
- 행정자치부, 『국민과 함께 한 정부혁신 3년-참여정부 3년 정부혁신 성과보고서』, 2006.

- Andre, Luis, Foster, Vivien, and Guasch, José Luis, “The Impact of Privatization on the Performance of the Infrastructure Sector: The Case of Electricity Distribution in Latin American Countries,”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3936*, World Bank, 2006.
- OECD, *OECD Guidelines i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2005.
- Sunita Kikeri & Aishetu Fatima Kolo, “Privatization: Trends and Recent Developments,”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3765*, World Bank, 2005.